

골목 야장부터 한밤의 고궁산책... 낭만 더한 ‘서울의 밤’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시동
골목상권·문화·관광 하나로 연결
달빛야장 25곳 운영... 상권개발
박물관·고궁 등 야간개방 확대도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서울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도심 주요 야간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 특구’ 지정 검토하고, 야외에서 먹는 ‘야장’ 문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토록 하며 박물관·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민선 9기 첫 정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야간경제 상생 특구 지정 검토와 ‘서울 달빛야장’ 25곳 조성 등을 담은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핵심 정책 의제로 논의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첫 간부회의의 핵심 의제를 야간경제로 정한 것은 서울의 미래 성장축을 바꾸겠다는 의지”라며 “야간경제는 단순한 골목상권 지원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상권과 교통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시민의 여가문화를 바꾸



을지로3가의 야장골목 모습.



지난 5월 경복궁 야간개장 모습.

/뉴시스

고 도시의 소비와 활력을 키우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전략”이라고 말했다.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검토

시는 도심 주요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상생특구에는 ▲야간영업 인센티브 ▲공개공지(민간 건축물 부지 안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와 옥외영업 시간 연장 등 규제 완화 ▲심야 대중교통을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방문객이 인근 상권까지 이동하도록 상권 연계를 강화한다. 내년 개장을 앞둔 서울아레나 일대에는 공연 전후 방문객이 머물며 주변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배후시설을 조성한다.

한강과 서울물빛나루 등 수변 공간은 야간 이용 제약을 완화해 24시간 체류와

소비가 가능한 경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올해 5곳 시범 운영

시는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야장’ 문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서울 달빛야장’을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이 확보된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도로 공간을 사용하고 가게 밖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자치구 조례 개정을 지원

한다. 보도 폭과 영업시간, 위생수칙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선정된 상권에는 보행환경 개선과 위생 시설 확충,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야장 운영 상인은 주민과 소음 차단, 정시 마감 등 자율 규범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약을 위반하면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화시설 야간 개방·심야교통 확대

시는 미술관과 박물관, 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하고 평화문 일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연계한 융복합 예술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한강공원의 ‘나이트 사우나’와 DDP의 ‘겨울잠자기 대회’ 등 야간에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발굴할 예정이다.

야간 안전 대책으로는 무질서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보안관과 시민참여 순찰 등을 확대한다. 심야버스 확대 운영과 자율주행 버스·택시 도입 확대도 검토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사총협 “교부금 초과세수, 고등교육에 써야” 북한산부터 한강 잇는 ‘고양 블루웨이’ 조성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학투자 강조
국가 산업과 발맞춰 인재양성해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증가분 등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총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 차원을 넘어 국가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최근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도 자원 조달 방식에는 이

견이 있었지만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미래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대학에 대한 국가 투자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총협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힌 점에 언급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청년·지방·교육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AI 데이터센터

와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대학 투자 확대 역시 국가 성장전략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인제대 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교육재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국가 교육재정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교육재정 정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18.42km 수변 문화축 구축

고양시가 북한산과 창릉천, 행주산성, 한강을 하나의 관광축으로 연결하는 ‘고양 블루웨이’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수도권 대표 수변문화관광도시 조성에 나섰다.

고양 블루웨이는 창릉천 18.42km 구간과 한강 수변을 연계해 자연과 사람,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수변 문화축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단절 없는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국가하천 승격과 국가정원 지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창릉천을 상류·중류·하류로 구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북한산 발원지에서 지족지구까지 이어

지는 상류 구간은 생태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힐링 거점’으로 조성한다. 지족지구와 삼송, 원흥, 창릉신도시를 잇는 중류 구간은 ‘생활·문화 특화 거점’으로 조성된다. 화도교에서 행주산성,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류 구간은 ‘역사·생태 거점’으로 꾸며진다. 또한 행주산성에는 완만한 경사의 데크산책로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친수정원을 조성해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창릉천과 한강이 만나는 6.4km 구간인 고양한강공원과 행주산성한강공원, 고양대덕생태공원은 역사와 생태를 접목한 테마형 친수공간으로 재 정비된다.

시는 생태공원과 시민광장, 체육시설, 전망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형 수변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첨단분야 우수 연구원, 70세까지 강단 선다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반도체 등 교원 인력부족 해소될 것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우수 연구원은 최대 70세까지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 위원회를 열고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이 교육·연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교자·교사 임차 범위 확대 ▲국립대 산학협력단 임차 보증

금 면제 등 3건의 안전이 상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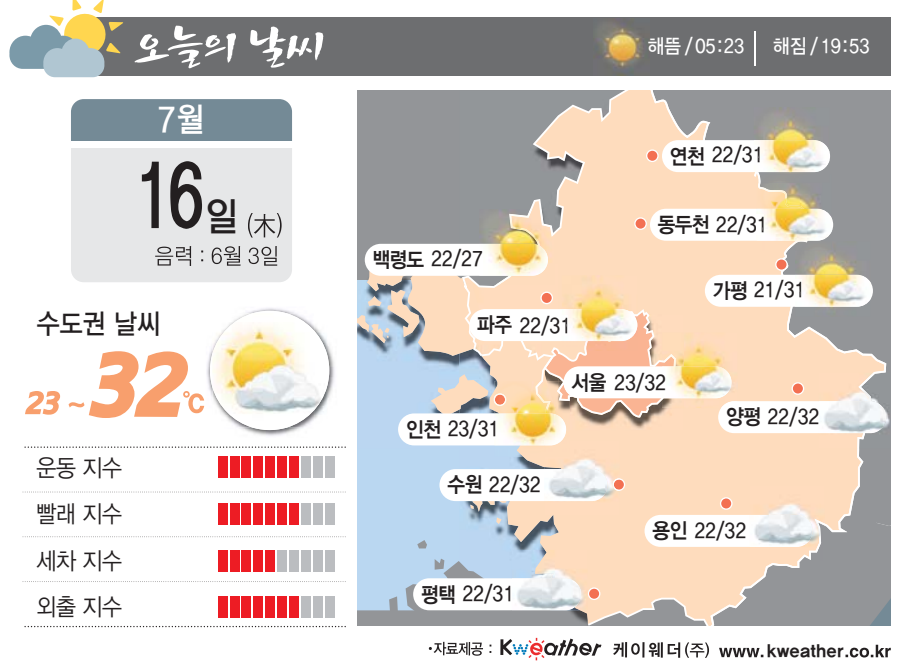
교육계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분야 교원과 연구자를 확보하고 국내 교육·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연구원 등은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정년인 만 65세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국·공립대학이 학적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기업연구소 연구원 등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교원 인력 부족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교자나 교사를 임차할 경우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자·교사 임차 운영 실태를 파악한 뒤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 임차 가능 범위를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도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국립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입찰 보증금 면제를 추진하는 등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이란 공습·봉쇄 다시 꺼냈다...“호르무즈 둘러싼 장기 소모전”
▲민주공공 에볼라 확진 환자 2011명, 사망자 754명으로 급증

/사진 뉴시스

▲영국, 내년 봄부터 16~17세 청소년 소셜미디어 ‘야간 통금’ 권고
▲“AI 잘 쓰면 월급 더 준다”...일본 기업들, AI 능력 따라 보상

▲중국 상반기 경제성장률 4.7%...2분기 4.3%로 2022년 말 이후 최저
▲인도, 美관세 낮추려 ‘강제노동 반영 제품’ 수입 금지